

KWDI

해외통신

2019년 11월 2차 (2019.11.16 ~ 11.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영국 UNITED KINGDOM



영국 야당들, 총선 앞두고 2030 유권자 표심 잡기 위한 양성평등정책 발표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영국 주요 정당들은 2019년 12월 12일 총선을 앞두고 최근 화두인 '남녀 임금 격차 줄이기', '여성 육아휴직 유급 기간 연장' 등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Labour)과 또 다른 주요 야당인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은 이러한 공약을 통해 양성평등 가치와 일·가정양립을 중시하는 20~30대 유권자 표심을 잡으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 2019년 11월 13일 BBC, 가디언, 인디펜던트 등 영국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동당은 12월 12일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2030년까지 성별 임금 격차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2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 격차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을 시행해 기업을 압박하고 있으나 해당 법이 실제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당은 성별 임금 격차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기관을 신설하고, 현재 25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의 적용 대상을 5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해법을 내놔다.
- 노동당에 이어 자유민주당은 여성뿐 아니라 더 넓은 사회적 소수를 겨냥했다. 자유민주당은 대기업이 남녀 임금 격차는 물론 BMME(영국에서 흑인, 아시안, 소수 인종을 일컫는 단어로 사용됨)와 성적 소수자(LGBT)의 임금 내용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하며 노동당에 맞섰다. 자유민주당은 '핑크 세금(pink tax)'을 없애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함께 했다. 핑크 세금이란 똑같은 상품인데도 여성 소비자를 겨냥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남성용보다 더 비싸게 가격이 책정되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여성용 택시, 여성용 면도기 등이 그 예다. 여성 육아 휴직 유급 기간을 연장하는 공약도 등장했다. 현재 영국에서 여성 직장인이 육아 휴직을 하면 임금을 지급받는 기간은 9개월로 제한돼 있지만, 노동당은 유급 휴직 기간을 총 1년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기업에서 폐경을 겪는 여성 직장인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훈련하도록 하는 여성 친화적인 공약도 발표했다.

참고자료

- Guardian(2019.11.13)
"Equal pay election rivals set out plans to target gender pay gap",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9/nov/13/equal-pay-election-rivals-set-out-plans-to-target-gender-pay-gap>
(검색일: 2019.11.25.)
- BBC(2019.11.13)
"General election 2019: Labour pledges to close gender pay gap by 2030",
<https://www.bbc.com/news/business-50412958>
(검색일: 2019.11.25.)
- Independent(2019.3.5)
"Pink tax on women's products targeted by Liberal Democrat MP",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politics/pink-tax-price-gap-women-razors-deodorant-gender-a8808736.html>
(검색일: 2019.11.25.)
- BBC(2019.11.8)
"General election 2019: Labour promises year of maternity pay",
<https://www.bbc.com/news/election-2019-50338831>
(검색일: 2019.11.25.)

야당이 양성평등에 방점을 둔 정책을 앞 다퉈 발표하는 데는 양성평등 가치를 중시하는 2030 젊은 층의 표를 끌어오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특히 노동당은 유급 여성 육아 휴직 기간 연장 공약으로 자녀가 있거나 앞으로 자녀를 낳기 원하는 젊은 여성층을, 폐경기 지원 공약으로 중년층 여성의 표심을 각각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집권당인 보수당은 야당의 공약을 두고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리즈 트러스 여성평등장관은 2030년까지 성별 임금 격차를 없애겠다는 노동당의 공약에 대해 “노동당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있다. 현재 남녀 임금 격차는 1997년에 27.5%이었지만 2019년 기준으로 17.3%일 만큼 그 격차가 이미 기록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FRANCE

프랑스, 성적취향 및 가족 구성 무관하게 모든 여성에 체외수정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초안 하원 통과

곽 서 회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지난 9월 말, 프랑스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컸던 생명윤리법 초안이 찬성 359표, 반대 114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이제 상원에 상정되고 만약 통과하면 공식적으로 채택 및 발효된다. 이번 법안은 43세 이하 모든 여성의 체외수정과 같은 임신과 관련된 의학적 시술을 허용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공공의료제도에서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리모 출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추진해 온 주요 사회개혁안들 중 하나로, 새 생명윤리법에서는 모든 여성이 개인의 성적 성향이나 가족 구조에 상관없이 생식권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 현행법상으로는 남성-여성으로 구성된 이성 커플 또는 부부 (이하 커플로 통칭)만 체외수정과 같은 임신을 위한 의학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또한 새 법안에서는 여성-여성 동성커플이 기증받은 정자로 수정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 해당 자녀는 18세가 됐을 때 본인 의사에 따라 정자 기증자를 찾는 것을 허용한다. 이는 현재 프랑스의 기증자 관련 엄격한 익명처리 및 신원보호 제도에도 일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도 한다.

현재 유럽연합(EU) 28개국 중 18개국에서 동성커플 또는 싱글인 여성이 임신을 위한 의학적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등으로, 시술시 여성이 동성커플인지, 이성커플인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프랑스에서 아이를 갖고 싶은 동성커플 또는 싱글여성은 대부분 해외로 가서 시술을 받아야 했다. AP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 30대 후반의 한 프랑스 싱글 여성은 결혼 없이 자녀를 갖기 위해 덴마크로 건너가 체외수정 시술을 받고 자녀를 출산하여 현재 양육중이다. 그녀가 지출한 여행경비 및 시술 비용을 합산하면 약 1만유로(한화 약 1,32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

참고자료

- AP News(2019.10.15),
“France OKs bill legalizing IVF for lesbians, single women,”
<https://apnews.com/5fdc102ac2094c1ca5bd15d6672be6f5>
(검색일 : 2019. 11. 21.).
- BBC(2019.10.06.),
“France IVF bill: Protests gather thousands in Paris,”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9955326>
(검색일 : 2019. 11. 21.).
- France 24(2019.09.27.),
“French lawmakers approve IVF for lesbians, single women,”
<https://www.france24.com/en/20190927-france-national-assembly-lawmakers-approve-ivf-lesbians-single-women>
(검색일 : 2019. 11. 21.).
- IFOP(2019.9.13.),
“Les Français, la PMA et la GPA - IFOP,”
<https://www.ifop.com/publication/les-francais-la-pma-et-la-gpa/>
(검색일: 2019. 11. 21.).

이번 생명윤리법안은 여전히 큰 논란으로 남아있다. 본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이번 법안이 공식 채택되면 연간 약 2천여 명의 프랑스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부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여론조사기관 Ifop에서 지난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1천여 명의 18세 이상 프랑스 시민 응답자들 중 동성커플 여성의 체외수정 시술에 65%, 싱글여성의 시술에 65%이 찬성한다고 나타났다.

반면 천주교 주요 인사들 및 종교단체, 보수단체들과 같은 반대 입장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식되는 가족의 틀,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야 하며, 새 법안은 프랑스 사회의 가족해체를 촉발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10월에는 파리에서 수만 명이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프랑스 상원의회 앞을 시작으로 “내 아버지는 어디에”,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필요하다”등의 구호를 외치며 파리 도심을 행진했다. 시위에는 보수정당의 정치인들 일부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프랑스 상원 의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독일 GERMANY



독일, 직원 11명 중 1명이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채혜원 독일통신원

최근 독일 정부의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에서 4년 전보다 더 많은 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연방차별금지기구가 총 1,531명을 인터뷰한 결과, 11명 중 1명이 원치 않는 성적인 발언이나 조언으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고 답했다. 2015년 조사 결과(직원 14명 중 1명이 성희롱 경험)와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다.

연방차별금지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성희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두 배 높다.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의 약 13%가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성희롱의 절반 이상(53%)은 고객이나 환자와 같은 제3자에 의해 발생했으며, 43%는 직장 동료로부터 발생했다. 이 중 20%는 선배나 상사에 의한 것이었다.

‘성희롱’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5명 중 4명은 성희롱이 한번 발생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며, 일부는 가해자가 여러 명이었다고 답했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성적인 의견이나 농담, 외모에 대한 부적절한 이야기나 몸짓, 캐주얼링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피해자의 26%는 원치 않는 접촉이나 접근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이 가해자에 의해 ‘섹스팅(sexting,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희롱’은 심한 경우 개인적인 미팅에 초대, 성적인 행위에 대한 요청, 협박 등도 포함하고 있었다.

참고자료

- EFAR(2018.3.13.),
“Sexuelle Belästigung
am Arbeitsplatz: Akute
Handlungspflichten des
Arbeitgebers”,
<https://efarbeitsrecht.net/sexuelle-belaestigung-arbeitsplatz/>
(검색일 : 2019.11.23.).
- FORUM VERLAG HERKERT
GMBH(2017.11.15.),
“Sexuelle Belästigung am
Arbeitsplatz: Was darunter
fällt und wie sich Arbeitgeber
verhalten müssen”,
<https://www.forum-verlag.com/themenwelten/personal-und-arbeitsrecht/personal-management/sexuelle-belaestigung-am-arbeitsplatz-was-darunter-faellt-und-wie-sich-arbeitgeber-verhalten-muessen>
(검색일 : 2019.11.23.).

- 독일 연방차별금지기구는 피해자가 경력 관리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 문제에 대해 목소리 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이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베른하르트 연방차별금지기구 대표는 “직장 내 성희롱은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를 임명하고, 관리자에게 의무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대부분은 독일 노동법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를 성희롱 문제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상사에게 성희롱 문제를 신고해야 하는 일이 두려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40%만이 성희롱 문제 상황에 맞서기 위해 상담사 등을 찾았다.
-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AGG) 12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성희롱 예방을 위해 규정을 만들고 확인된 성희롱 사건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고용주는 차별 대우와 불이익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기에는 예방 조치도 포함된다. 또한 고용주는 직업훈련이나 추가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용주는 경고를 발행하거나 전근 또는 해고할 수 있다.
- 이 외에도 직원은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여러 권리를 갖고 있다. 먼저 ‘업무 거부 권리’다. 직원은 고용주가 성희롱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이는 실제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성립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직원이 해고될 수 있다). 이어 차별금지 원칙을 어긴 고용주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또한 직원은 성희롱 문제에 대해 회사 또는 기업의 관할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 문제 제기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Antidiskriminierungsstelle des Bundes(2019.10.25.), “Studie zu sexueller Belästigung am Arbeitsplatz
- Jede elfte Person wurde in den letzten drei Jahren im Job belästigt / Mehr als die Hälfte der Übergriffe ging von Kundinnen und Kunden aus“, https://www.antidiskriminierungsstelle.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19/20191025_Studie_Sexuelle_Belaestigung.html?nn=6570036 (검색일 : 2019.11.20.).
- DW(2019.10.25.), “Sexual harassment on the rise in German workplace: study”, <https://www.dw.com/en/sexual-harassment-on-the-rise-in-german-workplace-study/a-50979194> (검색일 : 2019.11.20.).

독일 GERMANY



독일, 폭력 피해 여성위한 ‘여성의 집’ 및 전문상담센터 지원 확대

체혜원 독일통신원

- 독일 정부가 내년부터 4년간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주거 공간인 ‘여성의 집(Frauenhäuser)’과 전문 상담소의 지원을 확대한다. ‘여성의 집’과 전문 상담소를 확장 및 이전하고 새로 짓기 위해 총 1억 2천만 유로(한화 약 1,555억 원)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연방정부와 주(州)정부의 협업으로 이뤄지며, 2020년 1월부터 시작해 2023년까지 이어진다.
- 현재 독일에는 총 353개 ‘여성의 집’과 약 40개의 임시 주거시설이 있으며, 매년 약 15,000~17,000명의 자녀가 있는 여성과 약 30,000~34,000명의 여성이 이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여성의 집’은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1976년 베를린에 세워졌으며,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예산으로 이뤄졌다.

-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보호가 시급한 여성들은 자신과 자녀를 위한 안전한 보호 시설이 필요하며, '여성의 집'과 임시 주거시설은 그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연방 정부 자료에 따르면, 폭력 방지법과 주정부의 경찰법을 통해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폭력적인 파트너를 내쫓고 친숙한 환경에 머무를 수 있는 법적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보안상의 이유와 위협 등의 문제로 폭력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며, 이럴 경우 여성과 아동은 '여성의 집'에서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공간 지원을 늘리는 목표는 이들이 보호 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성들이 자녀와 함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혁신적인 형태의 주택을 만들 계획이며, 특히 지금까지 '여성의 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위한 보호 시설이 확장된다.
-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현재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와 노동부 등 연방 정부와 16개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원탁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원탁회의의 주된 목표는 피해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서비스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확대하는 것이다.
- 안스 슈피겔 라인팔트-팔츠 주 여성부 장관은 "독일에서는 3명 중 1명이 신체적 또는 성폭력의 피해자일 정도로 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며,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며 "주정부는 폭력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 보호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있으며, 원탁회의 참여 등을 통해 연방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관련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외에 독일 정부는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 '긴급전화'(Das Hilfetelefon, 08000 116 016)'를 운영 중이다. 2013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긴급전화' 상담은 24시간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전화뿐만 아니라 웹사이트(www.hilfetelefon.de)를 통해 바로 응답이 가능한 채팅, 이메일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이주여성을 위해 영어, 쿠르드어, 베트남어 등 총 18개 언어로 상담을 진행한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상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외국어는 아랍어, 러시아어, 터키어다.
- 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다른 채널로는 가톨릭 여성 사회서비스(Sozialdienst katholischer Frauen)에서 운영하는 '폭력 제로' 인터넷 채팅(<https://gewaltlos.de>)이 있다.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상담은 익명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여성의 집 협회'(Frauenhauskoordination e.V.)에서는 누구나 가까운 곳에 위치한 '여성의 집'과 상담소를 찾을 수 있는 검색엔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자료

- bento(2018.01.01.),
"Wir waren an einem geheimen Ort, an dem Frauen Schutz vor gewalttätigen Männern finden",
<https://www.bento.de/politik/frauenhaus-wo-frauen-und-kinder-schutz-vor-maennern-finden-die-drohen-unterdruecken-zuschlagen-einsperren-a-00000000-0003-0001-0000-000001977249>
(검색일 : 2019.11.26.)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9.10.21.),
"Start des Bundesinvestitionsprogramms „Gemeinsam gegen Gewalt an Frauen",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start-des-bundesinvestitionsprogramms-gemeinsam-gegen-gewalt-an-frauen-/140316>
(검색일 : 2019.11.26.)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4.12.10.),
"Gewalt gegen Migrantinnen",
<https://www.bmfsfj.de/bmfsfj/themen/gleichstellung/frauen-vor-gewalt-schuetzen/migrantinnen-schuetzen/gewalt-gegen-migrantinnen/80648>
(검색일 : 2019.11.26.)



캐나다, 이주 돌봄노동자 지위 개선을 위한 새 파일럿 제도 시행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 북미에서 아이나 노인 돌봄, 가사노동과 같이 저임금 돌봄 영역은 이주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직군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미국과는 달리 돌봄 노동자들을 외국에서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 중산층 가정들은 지난 수십년 간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TFW) 하의 입주돌봄 프로그램(Live-in Caregiver Program: LCP)을 통해 중남미와 필리핀 여성들을 입주 돌봄 노동자들을 고용해 왔는데, 과거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캐나다 영주권을 미끼로 경제적 저발전국의 여성들을 유인하고 이들 여성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 이에 2014년 캐나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그간 줄기찬 비판을 받아왔던 프로그램의 입주 요건을 폐지한 바 있다. 2014년 이 정책의 개편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에 입주돌보미(Live-in Caregiver Program: LCP)라는 포괄적 범주로 모집하였던 인력을 아이돌봄과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의료적인 돌봄으로 재편하는 한편, 만성적 영주권 심사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2,750명에만해 영주권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 2019년 하반기부터 캐나다 정부가 또 다른 파일럿 제도를 도입했다. 6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Home Child Care Provider and Home Support Worker)에서 보이는 가장 큰 변화는 이주 돌봄노동자들로 하여금 캐나다 입국 전에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캐나다에서 입주 돌봄 노동자로 일을 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은 캐나다 정부가 요구하는 요건 충족 후 일단 취업비자로 입국은 하지만 돌봄노동자로 3년 안에 24개월간 근로를 한 후에는 영주권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전 LCP에서는 노동자 본인만의 입국을 허용하여 가족들을 수년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 빈번해 비판을 받아왔는데, 새 파일럿 제도는 웨백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돌봄노동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직계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돌봄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는 개방형 취업비자로, 자녀들에게는 학생 비자를 발급하여 가족들이 함께 캐나다에 살 수 있게 했다. 또 다른 큰 변화는 앞으로 돌봄노동자들이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한 고용주를 바꾸는 데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전의 프로그램은 우리의 외국인 단기 취업 비자 프로그램과 같이 노동자가 직종이 아닌 특정 고용주에게 그 취업 비자가 묶여있는 형식이었다. 때문에 캐나다 입국 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들여온 고용주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노동자들이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든 어떻게든 주어진 3년 안에 2년의 근무기간을 채워 캐나다 영주권을 받고자 했기 때문에 노동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더라도 이를 이용할 수 가 없는 구조였다. 이런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새 파일럿은 취업비자를 고용주가 아닌 업종에 연동하여 캐나다 안에서 같은 일을 하는 한 노동자들이 고용주를 바꾸는 것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은 연 5,500명의 노동자들 당사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캐나다로 들여올 것이다.

참고자료

- Government of Canada(2019.10.31.), "Caregiver Program", <http://www.cic.gc.ca/english/helpcentre/results-by-topic.asp?top=28> (접속일 : 2019.11.20.).
- Caregivers' Action Centre(2019.06.), "Many barriers still exist for Care Workers in new program", <https://caregiversactioncentre.org/big-changes-in-new-caregiver-program/> (접속일 : 2019.11.19)

새 파일럿 제도에 대한 이주 돌봄 노동자들의 반응은 부분적인 성과라는 의견이다. 우선 지난 파일럿 제도에서부터 영주권 신청 시 이주 돌봄노동자들에게 요구하는 언어 및 교육 요건이 다소 높아졌는데, 이것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캐나다에서의 고등교육 혹은 이에 준하는 교육수준과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s) 5등급이 너무 높고, 특히나 이미 이전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를 충족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가족 동반은 환영할 만한 변화이나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와 자녀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그 외의 가족 형태, 예컨대 조부모나 친인척들과 사는 경우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자녀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이미 성인인 경우에는 학생비자가 무용지물이므로 자녀에게도 개방형 취업 비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새 파일럿 제도는 특정 고용주에 매여 있는 이전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에 와서 일하고 있는 새 프로그램으로 옮겨가 직종 비자로 자신의 비자를 바꾸고자 할 경우 새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언어나 교육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 다시 영주권 서류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과한 요구이므로 이미 캐나다에 와 있는 사람들 에게도 제한 없이 직종 비자로 변경을 허가 하라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스웨덴 SWEDEN



스웨덴, 18세 미만 미성년의 결혼을 금지한 아동 결혼 금지법 개정안 발효

홍희정 울산라다대학교 젠더연구센터 객원연구원

- 스웨덴은 2019년 1월부터 아동 결혼 금지법 개정안을 발효하여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모든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 스웨덴에서의 아동 결혼 금지법은 1734년부터 시행되었다. 법 제정 당시 여성은 만 14세, 남성은 만 20세 이하인 경우 결혼을 금지했으나, 1892년에는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이 만 16세, 1915년에는 만 17세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1973부터는 남녀 모두 만 17세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15세 이전 이미 다른 국가에서 결혼 후 스웨덴에 입국한 경우는 예외를 적용했다. 하지만, 수차례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 결혼은 매년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웨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특히, 2010년 가을 약 4개월 간 국세청에 신고 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결혼 건수는 74건이었으며 미성년자 파트너의 대부분은 여성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중 강제 결혼, 인신매매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어 스웨덴 정부는 아동 결혼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고자료

- Regeringskansliet(2018.05.29.), "Regeringen vill se totalförbud mot barnäktenskap"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18/05/regeringen-vill-se-totalforbud-mot-barnaktenskap/> (검색일: 2019.11.02.).
- THE LOCAL(2011.02.17.), "Swedish forced marriage laws 'not strong enough'", <https://www.thelocal.se/20110217/32114> (검색일: 2019.11.12.).

이민청은 처음으로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 강제 결혼과 아동 결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인 스웨덴 배우자를 만나 현지에서 결혼했거나 동거하기 위해 스웨덴으로 입국하고자 할 경우 파트너의 나이가 스웨덴 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밝혀냈다. 즉 파트너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결혼이 승인되면 스웨덴에서도 결혼이 자동 승인되어 유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민자의 경우 미성년자여도 이미 출신 국가에서 결혼을 했거나 임신을 했을 경우 예외가 적용되어 스웨덴에서 합법적으로 아동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당시 평등부 장관이었던 니암코 사부니(Nyamko Sabuni)는 “현행법의 예외 조항을 악용하여 소녀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후 2014년 7월 법을 개정하여 스웨덴인들은 외국인 파트너를 만나더라도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결혼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경우 출신 국에서 허용하는 결혼 연령(만 15세)에 따라 결혼을 해서 스웨덴으로 이주할 경우 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고, 미성년자와 결혼을 한 후 파트너가 만 18세를 넘기면 스웨덴으로 입국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보다 엄격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 이어졌다.

이러한 논의는 2017년 아동 결혼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이 후 더욱 격렬해졌다. 편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현행법은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측과 현행법은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측으로 나뉘었다. 전자는 아동 결혼 금지법의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이민자들의 출신 국에서의 아동 결혼 무효를 주장했다. 반면, 후자는 아동 결혼 문제는 단순히 스웨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때 실태 조사에 참여했던 마리 하이덴보리(Mari Heidenborg) 조사관은 스웨덴으로 이주한 이민자의 아동 결혼이나 외국인 파트너와의 아동 결혼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스웨덴에서 만 18세 미성년자의 결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몇몇의 EU 국가는 결혼 가능 연령이 만 16세이며, 합법적인 EU 국가에서 EU 시민 간 결혼은 스웨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유럽 협약을 통해 개인의 생명권과 사생활 권리 보장을 준수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면제 규칙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명예폭력 반대 단체(GAPF)의 대표인 사라 모하매드(Sara Mohammad)는 정부 조사관의 발표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스웨덴은 아동 결혼이 완전히 금지 됐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자국과 자국의 법률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유럽 연합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물러설 것이 아니라 아동 권리를 지지하기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스웨덴 유니세프 프로그램 담당자인 크리스티나 힐본(Christina Heilborn)은 “UN 아동 협약과 EU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아동 협약이 항상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말하며 현행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THE LOCAL(2017.12.06.), “Sweden to crack down on child marriages”, <https://www.thelocal.se/20171206/sweden-to-crack-down-on-child-marriages> (검색일: 2019.11.02.).
- THE LOCAL(2017.03.29.), “Swedish agency backtracks following child marriage brochure storm”, <https://www.thelocal.se/20180329/swedish-agency-backtracks-following-child-marriage-brochure-storm> (검색일: 2019.11.10.).
- THE LOCAL(2018.11.21.), “Sweden to stop recognition of child marriages carried out overseas”, <https://www.thelocal.se/20181121/sweden-to-stop-recognition-of-child-marriages-abroad> (검색일: 2019. 11. 10.).

이러한 상황 속에 지난 2018년 스웨덴 보건 복지위원회에서 발간한 “어린이와 결혼한 사람을 위한 정보(Information till dig som ar gift med ett barn)” 브로셔가 발표되었다가 철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브로셔는 스웨덴 내에서 만 18세 미만과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이미 미성년자와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조언을 담고 있어 정부 관계자 뿐 아니라 시민단체, 국민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고 담당자 사과 발표와 함께 즉시 폐기 되었다.

브로셔 사건 이후 다시 한 번 아동 결혼 금지법에 대한 개정안이 논의 되었고, 스웨덴 의회에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모든 결혼을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받아들였다. 개정안에는 파트너 중 한 사람이 18세 미만인 경우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EU 시민 뿐 아니라 스웨덴에서 거주하는 모든 이민자에게 적용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출신 국 법에 따라 미성년자와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스웨덴에서는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거주 승인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이후 원천적으로 스웨덴 내 모든 아동 결혼은 전면 금지되었다.